

민주 한병도 의원, 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혁신으로 전북 도약 이끌 것”

한병도 국회의원(의신을)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한병도 의원은 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혁신과 성공으로 전북의 도약을 이끌고,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2024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전북도당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려운 민생을 최우선으로 행기며, 유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의 현안에 관해서 “자신이 위원장이 되면 새민금특별자치도 남원 공공외대 등 전북의 모든 현안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성과

“빠아픈 반성·빠 깎는 혁신으로 다시 일어서야”

“실정 거듭 정부여당 견제 등이 해야 할 역할” 강조

“여론조사 주소 바꿔치기 등 반복시 미래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출마 포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선거철 여론조사 주소 바꿔치기 등 지방자치의 폐해들이 전라북도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복잡할수록 기본원칙에 충실히야 한다”며 “자기 민주당 지도부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다.

/김경수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과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 2.0 시대 자치분권 실질화 모색

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세미나 열고 발전 방향 논의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 의원 최형열)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과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벌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정책 마련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 모색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 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인사권이 독립되는가 하면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강화됐다.

세미나를 마련한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은 “의회에서도 새로운 지방자치 2.0 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맞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할과 운영 등 주민 주권에 입각한 전북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법 연구로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최형열 대표의원과 윤수봉 연구책임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들로 결성됐다.

연구회는 최형열(전주5),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 김정기(부안),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염영선(정읍2), 양해석(남원2),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 전용태(진안) 의원으로 구성됐다. /뉴스

경찰위 “경찰국 신설 유감… 법적 대응 조치 수행”

김호철 위원장 “법령상 문제제기 전혀 반영안돼”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 수행하는지 살필 것” 밝혀

“대우조선 특공대” 회의 주도 가능한지 의문” 지적도

국가경찰위원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구조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음에도,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를 통

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 법이 정하는 법적조치의 시한도 있는 만큼, 그 시한대로 결론을 내려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국 운영 등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화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충족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

관이 대우조선 과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여부를 놓고 경찰청 지휘부와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는 “파견 치안사무를 광장하지 않는 장관이 그런 회의를 주재,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

치안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은 경찰위가, 치안사무의 집행은 경찰청이 담당하는 이 제도는 확고하게 32년간 이어져오고 있고,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체’ 의결기권임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

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모두 경찰위의 심의·의결 시한에 해당한다고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압법을 통해 경찰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를 뚜렷여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현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릴의제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지자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 경찰위원회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진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뉴스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압법을 통해 경찰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를 뚜렷여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현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릴의제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지자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 경찰위원회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진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

성돼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뉴스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압법을 통해 경찰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